

“공직자답게 남 탓 말고 난방비 폭탄 책임져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남을 세웠다. 또 경제부총리 시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꺼내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며 “그러나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입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 국민의 삶을 챙길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긴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연일 윤석열 정부 매섭게 질타

**싸우는 길로 빠져서 민생 해결 안돼
국민 안심 이끌고 힘 합쳐 극복해야
지금 잘 하는 것이 정책자들의 역할**

그는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 글과 함께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신이 했던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과거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 중 경제 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묻는 말에

김 지사가 답변하는 장면이다.

김 지사는 “경제나 국정운영은 흘러가는 흐름이다. 과거의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잘하는 것이 정책을 맡는 책임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에도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발대식이 수원시 팔달구 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민주당 경기도당, 조직 확장으로 총선 승리 다짐

**노동·청년 등 상설위·특별위 발대식
임종성 위원장 “각자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8일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선영), 청년위원회(위원장 장민수),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 등 당 소속 상설위원회는 수원시 팔달구 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 조직 확대를 위해 신설된 동물보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명재승·김보미)와 또박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음)도 함께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이재

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시도당 상설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의를 다졌다.

우선 동물보호특별위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사고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평당원이자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또박기특별위는 “참여형 정치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당원 모집과 SNS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위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기도 했다.

창년위는 창년정책제안 및 창년위원회 비전 발표와 함께 ‘창년당원이 말하고 위원장이 듣다’라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도당위원장과 소통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도당의 적극적인 조직 확장을 통해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며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당은 조직 확장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 개설 적극 독려·추진하고 있다. 도당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분야별 공약사업 살펴봐달라”

염태영 경제부지사, 기우회 참석·당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올해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할 계획을 소개하며 기우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 1월 월례회에서 “김동연 지사님 취임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향후 도정 기반을 다졌고 이후 실현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3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해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정리했다”며 “기우회원들도 분야별 공약 사업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는 “민선 8기 조직개편도 지난해 말 완료됐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정책국,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5개 국실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추진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용어들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다시 논란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7일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도의회, 용어 수정 조례 입법 예고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내달 2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키로**

2019년 ‘동성애 인정’ 논란으로 무산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공공기관 및 사용

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건 제출됐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수차례 반발집회를 열고, 도민청원을 통해 재개정을 요구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와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차별과 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인권단체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포용의 의미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주장했다.

도의회는 결국 종교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14만 4161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제출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청구안에는 ‘조례가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안은 2020년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아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성평등 용어는 헌법 이념이나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 국비 사업에선 양성평등, 도비 사업에선 성평등으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번 입법안에서는 명칭만 상위법과 통일했는데,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난방 취약계층 지원금 신속 집행 약속

**도의회 민주당, 경로당·아동센터 방문
현장 점검, 의견 청취… 해결방안 모색**

**“도지사, 우선적 40만 원 지급 결정
여야 힘 합쳐 의회 적극 협조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아동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7일 한파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수원시 매향지역 경로당과 아동센터를 방문해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은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군과 협의단체에 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향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지난달에 요금이 두 배가량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40만 원씩 시급하게 지원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매향지역 경로당과 아동센터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각 40만 원씩 지원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내용의 논평에 대해 “지금은 남 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4~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은 남 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체제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고양10) 기획수석,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등과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김기용 기자

김종석, 첫 개방형 도의회 사무처장 내정

(전 도의원)

**염종현 의장, 후보 3인 중 낙점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 역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경기도의원(사진)이 내정됐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날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 모집에 9명이 지원했으며, 이달 19일 면접을 거쳐 3명이 인사권자인 염종현 의장에게 추천됐다.

이어 염 의장이 김 전 의원을 낙점함에 따라 신원조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임명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국



회 보좌관을 거쳐 지난 8~9대 민주당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16년에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2018~2021년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현재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있다.

글=김기용 기자, 사진=연합뉴스